

제429회 국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시 2025년11월11일(화)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국토교통부 소관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나. 주택도시기금
-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가. 국토교통부 소관

상정된 안건

-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2
가. 국토교통부 소관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2
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나. 주택도시기금
-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2
가. 국토교통부 소관

(11시01분 개의)

○위원장 맹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지난 결산 심사와 국정감사에서 각종 정책과 현안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그동안 제기하신 정책현안과 대안들을 적절

히 예산안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주거와 교통 등 민생과 밀접한 예산을 다루는 만큼 국민들의 입장에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어 예산 낭비의 소지가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과 청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제출 및 답변에 성실히 임함으로써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서면질의가 있으시면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취지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 산회 시까지 서면질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1시까지는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안 등에 대해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진행한 후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제2차관은 오전 국무회의 참석 후 국무회의가 끝나는 즉시 출석하기로 하였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참석을 사유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해외 출장을 사유로,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건강상의 문제로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불출석을 양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국토교통부 소관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나. 주택도시기금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가. 국토교통부 소관

(11시04분)

○위원장 맹성규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및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국토교통부 소관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윤덕 장관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2026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성장잠재력 저하로 인해 우리 경제가 저성장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낡은 산업구조,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을 극복

하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본권 보장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본적 삶의 질의 보장,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기술 주도형 초혁신 경제 실현,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 안전 보장을 중심으로 26년 총 728조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도 26년 예산으로 25년 대비 4조 3000억 원이 증가한 총 62.5조 원을 편성하여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 26년 예산안의 주요 투자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 생명을 최우선에 두고 안전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2월 29일 여객기 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전국 공항에 안전시설을 강화하고 스마트 건설안전장비와 싱크홀 탐사장비 확충,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등으로 일상의 사고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둘째, SOC 확충으로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거점공항 여덟 곳과 촘촘한 도로망과 철도망을 차질 없이 건설하고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건설사 지원을 위한 주택 매입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주거비와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공적주택 19.4만 호 공급, 청년 월세 지원 상시사업 전환, 주거급여 지원액 인상 등으로 주거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K-패스는 어르신 패스와 정액패스 2종을 새로 도입하여 서민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습니다. 아울러 12월 29일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일상 회복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5극 3특 기반을 마련하여 국토 균형성장을 달성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산업단지, 원도심 등 지역 성장거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활용하는 포괄 보조금도 올해 8000억에서 내년 1조 3000억으로 확대 편성하여 지자체가 스스로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국토교통 신기술 개발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국토교통 R&D 예산을 증액하여 연구개발 생태계를 복원하고 AI 기술과 미래 모빌리티 상용화를 통해서 우리 기업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PIS 펀드와 ODA 등으로 역량 있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도 돕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도록 노력을 했지만 국민의 눈으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심의 과정을 통해 채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략히 보고드립니다.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 나오셔서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문성요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26 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페이지 편성 방향입니다.

26년도 국토부 예산안 및 기금안 규모는 25년 대비 7.4%가 증가한 62조 4901억 원입니다.

예산은 금년 대비 6.9% 증가한 24조 2859억 원, 기금은 7.8% 증가한 38조 2042억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편성 방향입니다.

첫째, 국토교통 분야 안전투자 확대로 국민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습니다.

전국의 공항·도로·철도 안전인프라를 확대하여 국민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싱크홀 선제대응 강화 등으로 안전한 일터와 삶터를 만들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둘째, SOC 확충으로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전국 2시간대 간선철도망과 5국 3특 광역 도시철도망을 지속 건설하겠습니다. 10×10 격자형 간선도로망과 도시 내 광역·혼잡 도로 건설도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거점 공항 8곳도 건설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셋째, 주거비와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19만 4000호를 공급하고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K-패스는 어르신 유형 신설, 정액패스 도입으로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넷째, 국토 균형성장을 달성하겠습니다.

지역 거점도시를 AI시티로 탈바꿈시키고 빈집 철거 및 도시재생을 통해 원도심의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동일한 교통서비스를 누리도록 벽지노선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다섯째, 국토교통 산업 혁신으로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기업의 AI기반 제품 상용화를 지원하고 R&D 예산도 올해 대비 10%가량 확대하여 국토교통 산업의 기술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26년 세입예산입니다.

국토교통부 세입은 총수입 기준 올해 대비 75.8% 증가한 2조 9746억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 2026년 세출예산입니다.

국토교통부 세출은 총지출 기준 올해 대비 6.9% 증가한 24조 2859억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부문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도로 부문은 2025년 대비 13.1% 감소한 6조 2525억 원입니다.

고속도로는 18개 노선 건설비 등 9941억 원, 국도는 90개 노선 건설비 등 1조 6447억 원, 도로관리는 국도안전관리 등에 2조 6516억 원, 민자도로는 2개 노선 사업비 등 4613억 원, 지자체도로는 광역도로·혼잡도로 등 50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도로 부문 세부 편성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14페이지입니다. 철도 부문입니다.

철도 부문은 올해 대비 26.3% 증가한 8조 8411억 원입니다.

고속철도는 7개 사업 건설비 등 3732억 원, 일반철도는 21개 사업 건설비 등 2조 2619억 원, 광역철도는 15개 사업 건설비 등 9476억 원, 도시철도는 12개 사업 건설비 등 9186억 원, 철도안전 및 운영은 안전인프라 보강 및 철도운영 지원에 총 4조 33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세부 편성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항공 및 공항 부문입니다.

항공·공항 부문은 올해 대비 0.5% 감소한 1조 3464억 원입니다.

일반공항 건설 및 관리는 8개 신공항 건설과 공항시설관리 등 1조 1489억 원, 항공발견지원은 신산업 육성 등에 1798억 원, 항공운영지원은 항공안전기술원 출연 등 1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세부 편성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물류 등 기타 부문입니다.

물류 등 기타 부문은 올해 대비 21.1% 증가한 2조 5960억 원입니다.

건설·기술 정책은 건설산업 육성과 건설안전 강화에 2155억 원, 물류 정책은 물류산업 경쟁력 제고 등에 276억 원, 자동차 및 교통 정책은 교통사고예방지원 등에 1321억 원, 대중교통 육성은 서민 교통비부담 경감 등에 1조 48억 원, 광역교통 정책은 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대중교통 편의 제고에 11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R&D는 국토 분야 1877억 원, 교통 분야 2791억 원 등 총 53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사업은 국토 분야 590억 원, 교통 분야 190억 원 등 총 9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는 세부 편성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지역 및 도시 부문입니다.

지역 및 도시 부문은 올해 대비 0.5% 증가한 1조 5308억 원입니다.

지역개발은 혁신도시 등 지역성장거점 육성 등에 4354억 원, 도시 정책은 AI시티 조성 등에 7304억 원, 국토정보관리는 지가조사·지적관리 등에 2029억 원, 국토지리정보는 국가기본도 제작 등에 1426억 원, 건축 정책은 건축안전 강화 등에 1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세부 편성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부문입니다.

산업단지 부문은 올해 대비 12.1% 감소한 2442억 원입니다.

산단진입도로는 65개 사업 공사비 등 1845억 원, 산업단지지원은 기후변화대응산단 등에 5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세부 편성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주택 및 기초생활 보장 부문입니다.

주택 및 기초생활 보장 부문은 올해 대비 7.5% 증가한 3조 4749억 원입니다.

주거급여는 3조 2309억 원, 주택가격조사는 824억 원, 주택정책지원은 1553억 원, 주거환경개선은 6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는 세부 편성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는 26년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페이지와 51페이지는 내년도 완료사업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주택도시기금입니다.

26년 운용 규모는 올해 대비 4.5% 증가한 108조 512억 원입니다. 이 중 주택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총지출 기준 예산은 올해 대비 7.8% 증가한 38조 1497억 원입니다.

53페이지 분야별 편성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주택계정 임대주택 지원(출자)입니다.

다가구 매입임대 등 주택공급 관련 8개 사업에 올해 대비 182.4% 증가한 8조 32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 주택계정 임대주택 지원(융자)입니다.

통합공공임대 등 주택공급 관련 7개 사업에 올해 대비 15.9% 증가한 14조 45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주택계정 구입·전세 자금입니다.

주택구입 자금과 전월세 자금 2개 사업에 올해 대비 26.7% 감소한 10조 30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 주택계정 분양주택 등 지원입니다.

분양주택 융자와 신도시리츠 출자 2개 사업에 올해 대비 70.9% 감소한 42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 주택계정 주택시장안정입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 등 6개 사업에 올해 대비 2.8% 증가한 3조 95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 도시계정 도시재생 활성화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지원 등 8개 사업에 올해 대비 15.3% 증가한 67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세부 편성 내역은 59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26년도 운용 규모는 올해 대비 2.3% 감소한 2533억 원입니다.

이 중 피해자 지원에 직접 투입되는 총지출 기준 예산은 올해 대비 2.0% 감소한 545억 원입니다.

세부 편성 내역은 61페이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6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주엽 청장 나오셔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강주엽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26회계연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복청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국가 중추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국립박물관단지 조성사업 등 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회계연도 예산안은 이들 국책사업의 속도감을 높여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금년 예산 2205억 원보다 31% 증가한 28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세입예산은 총 2888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844억 원과 재산 및 경상이전수입 등 44억 원입니다.

세출 부문 편성 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리자면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7년 착공을 목표로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비 153억 원, 용지보상비 87억 원 등 총 240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회세종의사당은 내년도에 설계와 용지매입을 위해 기본설계비 228억 원, 용지보상비 728억 원 등 총 9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행정시설인 세종경찰청과 경찰특공대 청사 건립에는 2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은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회덕IC 연결도로 등 4개 노선 건설에 20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자치행정 지원을 위한 과학문화센터, 생활권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는 7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국립박물관단지에는 도시건축박물관 등 4개 박물관 건립비 492억 원과 국립박물관단지 법인 운영비 1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중추시설 주변 교통체계 효율화를 위해 도시 횡단도로 연구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회계연도 행복청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 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2026년도 행복청 예산편성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겸 청장 나오셔서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장 김의겸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새만금개발청장 김의겸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은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새만금을 최적의 산업·경제 중심 거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로·전력 등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82억 원으로 태양광시설 등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58억 원, 장기임대 용지 토지대여료 1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총 2012억 원입니다.

새만금 내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 정부안에 16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차전지 기업의 대규모 전력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 전력인프라 구축 사업을 2027년에 완료할 수 있도록 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새만금개발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유 수석전문위원, 국토 분야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요약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6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중 국토 분야에 대한 검토보고를 주요사항 위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3번 사항입니다.

신규 사업인 AI 시티 조성확산사업은 AI 특화 시범도시의 사업대상지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존의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과의 유사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 간 중복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연구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의 5번 사항입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중 빈집철거지원사업은 금년 대비 예산 규모가 크게 확대된 만큼 불용이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고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집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 사업 규모와 국비 지원비율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12번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은 주민들이 사업시행자인 LH 또는 지방공사에게 준공 이후에 사후 정산할 사업시행자 수수료의 일부를 사업 진행 단계에 맞추어 사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필요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현행의 예산안 편성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택도시기금입니다.

1번 사항입니다.

다가구매입임대의 용자 및 출자사업은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계획 대비 저조한 매입약정 실적을 개선하고 매입약정 이후 착공이 지연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4번 사항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최근 3년간 예산의 증가폭이 크고 향후 지출이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주택도시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동사업의 적정 지원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어서 행복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3번 사항입니다.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사업은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계획대로 2028년도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2번 사항입니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은 2025년 10월 말 기준 집행률이 3.7%로 저조한 상황이므로 사업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새만금 개발청의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교통 분야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수 전문위원입니다.

이어서 교통 분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일반국도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2025년도 7개 신규 세부사업의 8월 말 기준 집행률과 2024년도 신규 사업의 1차 년도 집행실적 등을 볼 때 일반국도건설 신규사업들의 집행부진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초기의 지연이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초기 집행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 집행 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번,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건설 사업은 최근 건설물가 급등에 따른 공사비 현실화 문제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개정 또는 특례 마련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하단 6번입니다.

일반공항시설관리 사업 중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된 조류충돌방지 사업과 활주로 이탈 방지 장치 설치 사업은 현재 실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편성된 공사비 예산을 적기 집행하기 위해 면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민·군 겸용공항의 경우 조속히 국방부와 협의를 완료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에 효율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14쪽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급한 보상금을 가해자로부터 회수하는 구상채권은 본질적으로 국가채권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구상수수료를 정함에 있어 국가채권 관리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준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천준호 위원님.

○천준호 위원 우리 위원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관련해서 명백한 위증을 했습니다. 서울시 국감 이후 10월 17일 부표 충돌 사고가 있었다는 게 밝혀졌고 또 지난 5월에 선박 하부가 찢어지는 사고가 있었다는 게 밝혀졌는데 이 모두가 시민의 제보에 의해서 폭로된 것입니다.

우리 의원실에서도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시범 운영 기간에 한강버스 고장 및 정비 기록을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 답변은 ‘존재하지 않는다’, 부존재라는 내용으로 답변이 온 바가 있었고요. 지난 20일 국토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재차 자료를 요구하니 그때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때 제출한 추가 자료에도 선박 고장 및 정비 기록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명백하게 사고를 축소하고 은폐한 것이고요. 국정감사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일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의 안전 문제 및 고장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받았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부표 충돌 사고는 유도선법에 따라서 시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는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에 물어보니까 관련 규정에 따라 보고가 되었다고 또 해명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 발언은 명백한 위증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한강버스 관련한 시민의 제보에 따르면 17일 날 부표 충돌 사고가 있었고 한강버스 101호 2m, 5100kg의 철제 부표 충돌 사고가 있었고 5월에도 한강버스 배에서 선박 하부가 찢어진 사고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니까, 이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니까, 은폐 사고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니까 그제서야 서울시가 자료를 공개를 했는데 모두 16건의 사고 자료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앞에 국정감사 자료 자체가 다 거짓말이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저희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국감에서 거짓 자료를 제시를 했고 또 서울시장의 거짓된 증언을 했다는 내용으로 위증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 관계자를 위증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맹성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천준호 위원님이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 국정감사 조치 계획은 저희가 다 그동안에 했던 모든 의견을 모아서 간사님들 간에 좀 협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권영진 위원 자료제출 요구……

○위원장 맹성규 먼저 권영진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권영진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우리가 지난번 10·15 대책과 관련해서 규제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 국토부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들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명단하고 그날 있었던 회의록 부분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종군 위원님.

○윤종군 위원 자료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난 11월 6일 날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해체 중이던 보일러 타워가 붕괴돼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해체 공사 시 근본적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해체 공사업법 제정이 시급하다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장관님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에 대해서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도 국토부에서 아직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건축물 관리법에는 건축물에 한정해서 해체 계획서와 해체 감리 제도만을 다루고 있고 도로나 댐, 항만, 플랜트, 원전 이런 거에 대한 해체 제도는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쪽이 훨씬 더 심각한 거지요, 해체할 때 사고 발생할 위험도 높고.

이번에 발생한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도 공작물 그러니까 굴뚝, 탱크, 철탑 등 건축물 외에 인공 구조물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건축물과 달리 해체 유지 관리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발전소 등 건축물 이외의 구조물에 대한 해체 공사에 대해서 법적·제도적 안전 장치가 어느 정도 마련돼 있었다면 이번 사고도 좀 미연에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만시지탄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지금이라도 앞으로의 미연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 해체 공사 시 근본적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해체 공사업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제가 제안을 했던 건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향후 추진 계획과 일정, 추진 방향, 그때 또 제가 요청했던 자료를 좀 시급히 의원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이연희 위원님.

○이연희 위원 통계와 관련해서 요즘 논란이 많은데 2024년 4월 30일 날 국토부에서 주택공급 실적 19만 호를 누락했다, 이거를 시스템 개편 과정에서 알게 됐다 해서 보도 자료를 냈는데 이거를 알게 된 거는 2024년 1월 달에 알게 됐어요, 국토부에서. 그런데 이거 발표는 총선이 지난 4월 30일 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어려운 자료가 아니에요. 시도 취합한 거를 통계만 내면 되는 건데 1월 달에는 19만 호를 축소해서 발표를 했다가 총선 지나고 나서는 누락해서 발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말이에요. 이게 총선을 앞두고 어떤 고의적인 통계 누락 내지는 조작 의혹이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감사원의 결과보고서 이 부분을 준비가 돼 있으면 오늘 중에라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에 따라 5분으로 하겠습니다.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핵심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함으로써 회의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질의를 오전 중에 종료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손명수 위원님.

○손명수 위원 경기도 용인시를 손명수입니다.

지난달 말 APEC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국제 다자외교 무대에 당당하게 복귀하였고 그 저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젠슨 황 회장이 대한민국을 AI 아시아 허브로 인식하고 최첨단 AI 반도체 칩 블랙웰 26만 장을 공급하기로 한 것은 너무나 큰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피지컬AI의 상징 중의 하나인데 자율주행차 예산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중국 다녀오셨지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다녀왔습니다.

○손명수 위원 많이 충격적이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손명수 위원 장관님도 다녀오셨다시피 우한은 지금 1500만 명 도시인데 1000대 이상이 이미 유료 로봇택시 서비스를 운행하고 있고요. 베이징도 서울시 전체 면적에 가까운 600km² 정도를 자율주행 시범지구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국은 로봇택시뿐만 아니라 지금 내몽골 자치구에서는 폭파 작업으로 매일 지형이 변하는 노천 탄광에서 화물차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 LA, 텍사스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에이모가 주간 25만 건 이상의 1500대로 자율 로봇택시를 돈 받고 하고 있습니다. 카일 보거트라는 사람, 크루즈 오토메이션 공동 창업자인데 ‘복잡한 도시에서의 1분 테스트가 그렇지 않은 곳에서의 1시간 이상의 가치가 있다’, 새겨 들을 말입니다.

다음이요.

우리나라 현실은 어떠냐? 강남에서 심야 시간에 단 3대로 자율주행 택시를 하고 있는데 자율주행이 아닙니다. 이게 운전자가 타고 있는 택시입니다. 거기서 무료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리고 상암지구에서는 스타트업이 3.2km 구간에서 러시아워를 피해서 4대가 지금 테스트 중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느 세월에 따라잡겠습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손명수 위원 다음, 전국 마흔일곱 곳이 시범 운행지구로 돼 있는데 운행 차량 그중에

열일곱 곳은 아예 0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심야 시간이나 한가한 낮 시간에 그것도 몇 대 해 가지고는 이것은 팔로우도 될 수가 없습니다. 100만 이상의 복잡한 대도시에서 24시간 테스트를 해야지만이 이것을 그나마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음.

이번에 예산이 45억 반영돼 있어요. 그런데 자율주행차는 결국 데이터를 많이 축적하고 신뢰를, 그러니까 많은 운행기록 축적을 통해서 ‘무사고다. 이게 안전하다’ 하는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려면 45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꼭 예산을 확대해야 되고 재정 투입이 공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도 좀 개선이 필요한데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자율주행 테스트를 할 때 영상자료로 비식별화 자료만 쓰게 돼 있어요. 원본 데이터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것 하고 있고 법안도 발의를 했는데 반드시 꼭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꼭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젠슨 황이 다행히 우리를 아시아의 AI 허브로 인식하고 이렇게 지금 협조적이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중국과 미국을 캐치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야 돼요.

다음 PPT.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0만 이상의 대도시, 이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복잡한 환경에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중국도 이렇게 했습니다, 미국도 이렇게 했고. 처음에는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서 충분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무사고 운행기록을 축적하고 그다음에 그게 되면 조수석으로 옮기고 거기서 안전성이, 신뢰도가 확보되면 다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레벨4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자율주행 시범도시를, 큰 도시를 선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3년 이내에는, 적어도 3년 이내 우리도 유료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관님 꼭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한말씀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하여튼 이번에 중국 다녀와서 너무 놀랐고요. 그냥 일반적인 조치, 노력이 아니라 상당히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정부대로 또 기업은 기업대로 이것들을 연결시켜서 정말 놀랄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번 예산안에,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희 국토부가 책임지고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손명수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룰베이스와 E2E 방식 아십니까? 모르세요? 자율주행은 그동안 쪽 룰베이스로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안 됩니다. 지금 이미 다 E2E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내년도 우리가 시범사업을 할 때 반드시 E2E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손명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김희정 위원님.

○김희정 위원 부산 연제구 국민의힘 김희정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 장차관 전용차량 몇 대 쓰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희정 위원 장차관님 전용차량 몇 대로 등록해서 쓰고 계십니까?

그동안 제가 질문하면 지속적으로 질문을 잘 못 알아들으셔서 상당히 토의가 힘든 것 같습니다. 시간 감안 좀 해 주십시오.

시간 다시 돌려 주세요.

○위원장 맹성규 왜…… 그냥 하세요.

○김희정 위원 아니, 시간 돌려 주세요.

○위원장 맹성규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김희정 위원 시간 다시 돌려 주세요.

○위원장 맹성규 왜 돌려 드려야 됩니까?

그냥 하세요. 제가 나중에 부족하면……

○김희정 위원 예.

장차관 전용 관용차량 몇 대 쓰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정확히 모르겠고요. 장관은……

○김희정 위원 본인이 쓰고 있는 차량 몇 대인지 모르신다고요, 차관하고 다 같이?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장관은 세종에 있고 정동에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김희정 위원 2개 다 장관 차량으로 등록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등록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김희정 위원 본인이 타고 다니는 차량이, 교통국 주무 부처 장관이 다른 부처 장관도 안 하는 짓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희정 위원 국토부 공용차량을 현행법 위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무원 차량 관리 규정 위반입니다. 장차관이 쓰고 있다라고, 6대나 쓰고 있다라고 하면서 차량운행일지 쓰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장관이 쓰고 있다고 등록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래요?

○김희정 위원 살펴보고, 문제 있으면 내년도 예산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타고 다니는 차량에 대해서 차량이 바뀌면 차량 바뀌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장차관 차량이 6대나 지금 배정돼 있던데 그런데 실제로 등록은 3대만 하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죄송합니다.

○김희정 위원 교통부장관 아니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죄송합니다. 저는……

○김희정 위원 다른 부처 장관들도 안 하는 짓 하고 있더라고요.

바로잡아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희정 위원 그다음에 집값 통계를 7~9월 통계를 썼다면 규제지역에서 빠질 수 있는 지역이 어디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러니까 이번 서울 4곳, 경기도 4곳 이렇게 말씀……

○위원장 맹성규 예, 그것 말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것 말씀드리면 됩니까?

○김희정 위원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 말씀하십시오. 7~9월 통계를 썼다면 이번 규제 지역에서 빠질 수 있는 지역이 어딘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서울에 4곳이고요.

○김희정 위원 어딘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중랑·금천·강북·도봉. 경기 4곳이고요, 성남 중원, 수원 팔달, 수원 장안, 의왕 그렇습니다.

○김희정 위원 추가로 은평하고 성남 수정도 들어갈 겁니다. 총 10곳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가 그렇게 인식되어서요.

○김희정 위원 아니, 온 국민이 지금 이 통계 때문에 문제 되고 있는데 어느 지역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오늘 국회를 나오십니까?

그러면 제대로 된 통계를 썼다면 빠져야 되는 지역, 장관님이 지금 8개만 불렀고 아마 뒤에서 다시 종이쪽지 줘서 10곳 받으신 것 같은데요. 이 지역 주민들은 어떤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현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그다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규제 요건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정 위원 어떤 제재를 받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토지거래허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김희정 위원 아니요, 방금 말씀드린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지 이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대출 제한이 강화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리고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희정 위원 그리고 이주비 대출도 제한받는 것 알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희정 위원 그러면 장관님이 말씀하신 이런 제한, 제대로 된 통계로 규제지역에서 빠졌더라면 제한받지 않아야 될 제한을 수도권에 있는 10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법에…… 지난번에 국정감사 기간에도 제가 투기과열지구하고 조정대상지역하고 구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그때도 말을 못 알아들으시고 시

간을 잡아먹었어요. 그때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정대상지역을 정할 때 그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적정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최대한의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희정 위원 예,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성실한 의무를 다하셨습니까, 이 법과 관련돼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정 위원 시군구 단위로 상황이 다른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 현행법을 어겼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현재 답변하신 것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러니까 조정대상지역을 선정하는 문제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희정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제지역에 들어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피해를 들으셨는지도 얘기하고 듣고도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하는 게 국토부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입니까? 제가 보기에 제대로 된 통계를 쓰지 않은 게 바로 국토부장관님의 시장교란행위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다음 윤종오 위원님.

○윤종오 위원 진보당 울산 북구의 윤종오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콜택시 인건비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윤종오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에 보면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정감사 때 약속하셨으니까 가능한 한 올해 반영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신경을 좀 써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기재부장관에게 한번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의제 삼아서 대화를 해 볼 생각입니다.

○윤종오 위원 여하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더 관심 가져 달라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윤종오 위원 그다음 이번에 동서발전 사고와 관련해서 많이 안타까운데요. 사실 11일 현재 해체기간이 한 4개월 정도 이미 지난 것 같아요. 공기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을 보면 ‘공기 단축하려고 너무 무리하게 진행되었다’ 이런 증언들이 있고 발주처에서도 공기 진행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거든요. 동서발전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상 핵심 관리가 필요한 공정으로 선정된 위험요소 공정이 이렇게 지적돼 있거든요. 특별히 안전관리

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감리도 없었고 공사기간에 쫓겨서 위험한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진짜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문제는 보일러실은 높이가 65m에 달하지만 건축법상 건축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해체에 대한 허가 절차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한 통제제도 이런 부분들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토안전관리원에 물어봤더니만 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았던 것이 확인되었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맞습니다.

○윤종오 위원 마지막, 문제는 건물을 짓다가 중간에 중단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해체할 수도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윤종오 위원 지금 이것 전혀 신고도 없이 사용 승인도 받을 필요 없이 그냥 해체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까 윤종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도 실제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위험성에 대한 전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만약에 그게 있었다면 이번 사고도 막을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또 하나는, 이번에 제가 현장에 가서 느낀 건데요 건물이라든가 다른 해체 작업에 대한 저희 노하우와 경험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실제 그런 것도 많이 부족하다는, 그래서 전문성을 좀 강화하는 것도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하여튼 제가 조금 전에,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은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도 준공이 안 되면 그냥 아무런 승인 없이 해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 보완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윤종오 위원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늘었다고 하지만 사실 윤석열 정부 때 워낙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정상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이 2026년도에 5만 7500호로 돼 있는데요 지난해 6만 6500호보다 무려 9000호 정도가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 때 반영된 것보다, 5년씩 연차적으로 한 해씩, 한 해씩 늘려 가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거의 한 5000억 이상 줄었습니다, 20조 8000억에서 20조 3000억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윤종오 위원 어쨌든 장관님께서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정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확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맞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래서 최소한 문제인 정부 시절 이전 이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좀 늘

릴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윤종군 위원님.

○윤종군 위원 장관님, 빈 건축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주 전에 한 유튜버가 방치한 폐병원을 촬영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됐습니다.

영상을 못 들려 드려서 좀 아쉬운데요. 보시면 사용하던 의약품이 그대로 남아 있고 심지어 노숙자가 생활한 흔적까지 발견이 됐습니다. 자칫 범죄 장소로 악용될 우려도 있는데요. 다행히 국토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10월 2일에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보셨듯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복지부 협업체계도 필요해 보이는데 국토부 대책에는 이게 빠져 있다고 그러합니다. 복지부뿐만 아니라 필요한 타 부처와의 협조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런 방향으로 대책을 좀 보완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윤종군 위원 그런 방향으로 보완해 주시고요.

또 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빈집 등 빈 건축물에 대한 특별법을 이미 2015년에 만들었고 소유자 불명의 토지에 대해서도 2018년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도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소유자 불명 토지를 국가가 수용할 수가 있지만 개발·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소규모 토지는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이걸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빈집과 건축물뿐만 아니라 토지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위한 국토부 차원의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윤종군 위원 꼭 좀 진행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윤종군 위원 장관님, 다음 PPT 좀 봐 주시지요.

저 사진인데요. 올해 7월 달에 울산의 한 초등학교 앞의 아스팔트가 녹아서 하수구까지 흘러들어 간 사진입니다. 기후위기로 아스팔트 녹음 또 포트홀 등 우리 도로가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다음 PPT요.

시내도로가 아닌 고속도로 포트홀 발생 현황입니다. 해마다 5000건에 달합니다. 보시면 국토부가 도로 유지·보수 관련된 사업비를 꾸준히 늘려 왔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 총예산이 2020년에서 2025년 사이에 30% 정도 증가한 반면에 포트홀을 관리할 수 있는 도로 포장·정비 예산은 변동이 거의 없더라고요.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도 더 줄어들었습니

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도로 유지·보수 예산, 특히나 포트홀 사후 대처할 수 있는 도로 포장·정비 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예산을 현실화하는 데 장관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예산 증액 문제에 대해서 재정 당국하고 꼭 협의를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균 위원 국도도 아니고 시내도로도 아닌 고속도로에서의 포트홀은 거의 사고로 직결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꼭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한 장기적으로 기후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신기술 적용 이런 사전 예방책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국토부도 현재 관련 R&D를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차선 재귀반사도 조사 장치를 연구하고 동절기 결빙 방지를 위한 신소재 개발을 하는 등 이런 내용들은 있는데 정작 중요한 폭염, 폭우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도로 자체의 기후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 연구 이거는 아직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반면에 세계 각국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로 포장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서울시가 도로의 열을 차단하는 차열성 포장도로 시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시공 직후에는 포장도로의 온도가 10도가량 낮게 나타나서 성과를 보였지만 가격이 매우 비싸고 내구성이 부족해서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이런 연구용역을 하거나 조사를 할 때 구체적인 설계 기준, 성능 검사와 절차, 유지관리 방안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관님한테 제안드리는데 도로의 기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토부 차원의 주도적인 연구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토부 차원의 기술개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당장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도로 포장 예산 현실화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견해가 어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당국하고 잘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내용들이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돼서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윤종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혜 위원님.

○김은혜 위원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은혜 위원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국민에게 불리한 처분, 특히 세금을 더 징수하게 되는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야 된다, 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은혜 위원 10·15 대책에 대해서 장관님은 대통령님께 언제 대면 보고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면 보고한 적이 없는데요.

○김은혜 위원 그러면 대통령님 안 만나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10월 15일 대책 관련해서는 대통령께 직접 대면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은혜 위원 그러면 대통령님 의견은 간접적으로 어떻게 전달 받으셨습니까? 누구에게 받으셨나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국토부하고 기재부, 그다음에……

○김은혜 위원 부처가 다 결정한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렇지요. 금융위원회……

○김은혜 위원 그러면 용산은 이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정책실장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김은혜 위원 정책실장의 의견은 뭐였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전체적으로 계속 논의를 해서 하나된 의견이 되었습니다.

○김은혜 위원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이런 폭력적인 정책에 대통령실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고요?

민주당은 그러면 사전에 이 안을 공유받고 어떤 의견이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고위당정회의는 제가 직접 참여하지……

○김은혜 위원 고위당정 전예요. 고위당정 전에는 당 의원들이나 공유를 안 하셨어요? 특히 서울 지역 의원들은 타격이 심할 텐데?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부 의견들은 사적인 차원에서 제가 대화를 나눴고요.

○김은혜 위원 뭐라는 입장이었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은혜 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구민들이 그렇게 아우성인데 아무 말씀 안 하시나요, 민주당 의원님들은?

장관님, 하나 더 여쭙보겠습니다.

10월 14일에 정부는 9월 부동산 가격 통계를 갖고 있었습니까?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부동산원에서 13일 날 오후에 저희에게 그걸 통보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은혜 위원 그러면 통보를 받고 그거를 접수하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실무자가 그걸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은혜 위원 그러면 실무자나 국토부는 9월 통계를 13일 날 알고 있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저는 13일 날 그 9월 통계가 부동산원에서 넘어온 것에 대해서……

○김은혜 위원 장관님은 모르셨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보고를 받지 않았고요.

○김은혜 위원 PPT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14일 날 주정심에서 의결될 때 이미 대통령실도 14일 날 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통계를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통령실이 언제 보고받았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은혜 위원 부동산원에서 14일에 이미 대통령실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14일에는 9월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은 장관님이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위증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뭐라고요? 못……

○김은혜 위원 14일에 이재명 정부는 9월의 가격 통계를 갖고 있었지요, 부동산원이 이미 보고를 했으니까요.

그러면 서울 전역, 경기 12곳까지 투기과열지구에 포함이 돼서 대상자가 몇 명인 줄 아시나요? 9월 통계를 적용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8월 통계를 적용했기 때문에 엉뚱하게 피해를 본 분들은 270만 명입니다. 이분들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세요? 장관님은 9월 통계를 쓰면 10개 지역이 제외될 수도 있다는 것 언제 아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무슨 의미인지를 잘……

○김은혜 위원 9월 통계를 쓰면 10개 지역이 제외될 수 있었다는 것 언제 아셨습니까? 신문 보도 보고 아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언론 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김은혜 위원 장관님, 추석 연휴에 발표하는 것 막으셨다면서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은혜 위원 그렇게 10·15 대책은 작동을 잘한다고 하는데 왜 추석 연휴 전에 막으려고 하셨습니까? 그만큼 이 파급효과를 알고 막으려고 하셨을 텐데 그러면 이렇게 14일까지 정부가 9월 통계를 다 갖고 있음에도 왜 그 단 하루를 미루지 못해서 10월 15일 대책 그렇게 급하게 발표하셨어요? 저희한테 들어오는 정보는 실무자들이 국민에게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미루자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 밀어붙이자는 용산의 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이야기와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그 제보가 사실이면요 그 연관되어 있는 관련자들 제가 다 징계해 버리겠습니다.

○김은혜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장관님, 장관님 밑의 사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 증거만 주시면 제가 퇴사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다 퇴사시켜 버리겠습니다.

○김은혜 위원 지금 용산은 부처 탕을 하고 부처는 실무자 탕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장관님도 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대장동의 범죄자들에 7000억 주머니에 팍팍 꽂아 주는 정부가 어떻게 서민들, 집 하나 갖지 못해서 세금 하나 내지 못하는 서민들 주머니를 털려고 이렇게 규제지역까지 행정처분을 폭력적으로 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말을 삼가 주십시오!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돈을 팍팍 꽂아 주는 정부가……

○김은혜 위원 맞지요. 항소 포기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닙니다! 말을 삼가 주세요!

○김은혜 위원 항소 포기로 그러면 7000억을 던져 주는 것 이재명 정부가 한 것 아니면 누구입니까? 이라고서도 국민들의 부동산을 지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안태준 위원** 아니, 그것 검찰이 계속 조작해 왔잖아요. 말씀 참 계속 심하게 하시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여기서 정쟁하자고 하는 겁니까, 저하고 지금?

○**김은혜 위원** 정쟁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항소 포기는 사실이지요. 이게 어떻게 정쟁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부동산 대책 얘기하시지요.

○**김은혜 위원** 행정소송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그때까지 국민들의 재산권 그리고 국민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되는 것 인정하시지요? 그리고 9월을 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장관님, 솔직하게 그 부분은 아쉬움이 있다 표명하셨지요? 그러면 행정소송 끝날 때까지 이렇게 부처는 팔짱 끼고 기다리실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행정소송 결과 여부는 국토부가 법적인 위반행위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가르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대책에서 이번 10월 15일 대책은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시책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다면 벌을 받아야지요, 당연히. 벌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벌 받을 사안이 아닌데 자꾸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결코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혜 위원** 장관님,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시면……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리고 정쟁으로 막 확대시키지 마십시오.

○**김은혜 위원**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시면 9월 통계를 넣는 게 맞았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현재 지금 국토부 공무원들은 통계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받고 있고 징계받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은혜 위원** 장관님!

○**위원장 맹성규** 위원님, 정리하십시오.

○**김은혜 위원** 잠깐만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것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도대체?

○**김은혜 위원** 장관님, 언어를 오염시키지 마세요. 문재인 정부 때 통계 조작을 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통계 조작은……

○**이건태 위원** 질의시간 종료됐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무리 정치지만 좀 과하잖아요!

○**김은혜 위원** 매주마다 달라고 하는 거였지 이렇게 중요한 경제위기의 통계 조작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통계 때문에 국토부 공무원들 다 징계하고 수사받게 해 놓고는 이제 와서 통계 원용하지 않았다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김은혜 위원** 통계 조작 가해자가 왜 통계 조작 피해 호소인으로 둔갑합니까!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건태 위원** 질의시간 종료됐습니다!

○**이연희 위원** 아니, 누가 통계 조작을 해요!

○위원장 맹성규 위원님, 정리하세요.

○이건태 위원 아니, 상습적으로 질의시간을 초과하지않아요!

○위원장 맹성규 정리하십시오.

○김종양 위원 위원장님, 고함치지 마라고 그러세요, 장관도 그러고 지금.

○권영진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윤종균 위원 아니, 누가 고함치는데 그래요, 진짜.

○위원장 맹성규 아니, 그러니까 회의가……

○권영진 위원 아니, 위원장님!

○김종양 위원 질의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강하게 좀 할 수 있지만……

○권영진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봐. 아니, 장관이……

○김종양 위원 듣는 사람이 그렇게 해 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위원장님이 좀 따끔하게 질책을 하고 지적해 주세요.

○위원장 맹성규 예.

○권영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맹성규 예, 하세요.

○권영진 위원 위원장님, 장관께서 위원들이 질의할 때 조금 거슬리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장관이 위원들을 호통을 치고 나무라고 이래도 위원장님이 한 번 제지를 안 하셔서, 이렇게 의사진행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장관에게 답변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서 위원님들께 호통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사과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맹성규 제가 현재 회의를 진행하면서 저는 가능한 한 균형을 잡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개입해서 하게 되면 결국은 위원님 질의에 또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회의가 종료된 이후에 시정할 것이 있으면 다시 서로 논의해서 시정을 하고 이걸 다시 피드백시키는 그런 저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의견을 내게 되면 아무래도 또 위원님들한테……

○권영진 위원 아니, 장관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야지요.

○위원장 맹성규 아니, 저도 장관이 답변 저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왜 그러셨느냐 하면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니까 나중에 한번 그걸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연희 위원 아니, 질의할 때 허위 사실을 가지고 질의를 하니까 장관께서 토로를 하신 거지요.

○김은혜 위원 뭐가 허위 사실입니까?

○위원장 맹성규 그렇게 하시자고요.

위원님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염태영 위원님.

○염태영 위원 국토위는 적어도 정책 대안을 갖고 늘 질의응답을 해 왔던 그런 전통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의 질의 의도는 10월 15일 대책이 위법하다는 걸 전제로 하고 또 용산에서 수도권에 규제지역을 밀어붙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

었다 또는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7000억을 쫓아 주려고 했다 이런 표현은 정말 정책 대안 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정치적 공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은 국토위에 서만큼은 있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염태영 위원 이와 관련해서 10월 15일 대책, 사실은 발표 시점이 추석 연휴가 3일부터 9일까지라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기관들은 3일부터 12일까지 휴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3·14일 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할 때 부동산원의 9월 달의 통계를 활용할 수 있었느냐의 여부가 지금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동산원의 통계 정보는 내부 보고한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외부 발표된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내부 보고된 기준입니다.

○염태영 위원 그런데 13일부터 이미……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내부 보고된 기준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픈돼 있는 자료를 말하는 겁니다.

○염태영 위원 그러니까요. 실제로는 통계 자료는 외부 발표된 것을 갖고 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의사결정할 때는 그렇게 활용합니다.

○염태영 위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은 13·14일 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에 들어갈 때는 외부에 아직 발표되기 전이라 그 자료를 쓰기가 어려웠다는 것이 현실적인 현재의 조건 아니겠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자료를 쓰면 안 됩니다, 통계법상. 위법입니다.

○염태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법이라고 전제할 수는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쓰는 게 위법입니다.

○염태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9월 통계를 쓰고 10월 중순에 발표하는 것 이것으로 보고 그 전에 통계가 발표돼서 공표됐다면 그것은 그렇게 해야 마땅한 거고 그렇지 않다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자료를 그 전 달로 쓸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 줘야지 이것이 정치공세로 무조건 수도권 일부 지역들을 규제지역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왜곡된 허위, 그 전의 자료들을 일방적으로 의도를 갖고 활용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닙니다.

○염태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규제지역의 지정 여부 충족 요건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후에 규제지역 조정 필요성, 시기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지요? 이번에 그래서 10개 지역이 9월 달 통계로 보면 들어가지 않아도 될 지역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이후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시기 같은 것을 검토할 예정도 갖고 있는지요,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한번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가는 게 중요하지만 실제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기 때문에 한쪽 측면에서는 너무 과한 문제에 대해서 어찌할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점도 있고요. 또 현재 지금 화성이나 구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동산가격이,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부 확대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정해진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통해서 정부 시책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염태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해서 정부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도 규제지역의 지정 요건 충족 여부라든지 그에 따른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 같은 것은 바로 시장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염태영 위원** 제가 질의할 것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표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도로공사 박건태 기술부사장님, 지금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고속도로 45개소를 보면 45개소에서 열선 공사를 해요. 도로 열선 공사 아시지요?

○**한국도로공사기술부사장겸도로본부장 박건태** 예.

○**염태영 위원** 그런데 원도급사는 20개 사인데 하도급사는 그 20개 사에서 그중에서 3개 사만 계속해서 씁니다. 그리고 하도급 업체가 이 업체들만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나라장터 입찰공고 검색을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만 해도 타 기관의 도로 열선 설치사업 계약 현황을 보면 16개 업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유독 도로공사 열선 공사만큼은 매년 3개 사가 하고 또 그중에 2개 사는 대표도 같았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한 업체만 계속 쓰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로 열선 공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반드시 도로공사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건강한 하도급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부사장님 답변과 국토부장관님께서도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보세요.

○**한국도로공사기술부사장겸도로본부장 박건태** 도로공사에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 문제는 단순히 개선 방안뿐만이 아니고 이 과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에 대해서 대안도 필요하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도 살살이 지켜봐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염태영 위원** 이런 사태가 이 정도까지 진행된 것에 대해서 충분히 내부적으로 조사

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염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안태준 위원님.

○안태준 위원 경기 광주을의 안태준입니다.

저도 예산 시간에 이 얘기 하는 게 탐탁지 않은데요. 그런데 잘못된 얘기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장관님이나 국토부에서 이번 정책 그냥 결정해서 발표했습니까? 원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열어서 발표를 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반드시 열어야만 됩니다.

○안태준 위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시행 세칙을 보면 3일 전에 자료를 배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안태준 위원 그러니까 10일 정도에는 배포를 했을 거고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안태준 위원 13일 날 오후 4시 정도에 9월 통계를 제공받았다고는 했는데 15일 발표 전까지 그 정보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 가야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것은 위법입니다.

○안태준 위원 감옥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썼네 안 썼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9월까지 반영을 하는 게 유리한지 8월까지 반영을 하는 게 유리한지 재 보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조작입니다. 법대로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법대로 하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여러 가지 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는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확대할 곳도 있고 축소해야 될 곳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전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면밀히 살피고 고려해서 잘 조정해 주시되 흔들리지 말고 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안태준 위원 이것도 다시 한번만 또 말씀을 드리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이미 10월 13일부터 가동이 되고 있었어요, 이미. 그런데 13일에 공포하지도 않을 그런 것을 제공을 억지로 해 가지고 하면 그것이 조작입니다. 그게 지금 만약에 몇 군데가 빠져서 그렇지 추가로 그게 더 들어갔어 봐요. 그러면 완벽한 조작입니다, 그런 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또 고발당하셨더라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안태준 위원 그러니까 고발당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고발을 당했는데 물론 이런 것들이 의도적으로 조작을 했다, 통계 발표 전에 10·15 대책을 발표했다 이런 야당의 주장은 국민의 주거복지와 직결되는 부동산 정책을 정쟁으로 이끌고 가겠다는 의도

가 분명해 보입니다. 입장은 알겠어요. 입장은 알겠지만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관심이 높은 것을 이용해서 주거안정 문제를 정쟁으로 비화하거나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는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하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민생 회복과 주거안정을 위한 건설적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할 때다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흔들림 없이 해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안태준 위원 저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딱 몇 가지 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이번에 국토부 소관 예산을 보니까 역대 최대 규모인 62.4조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 대비 7.2%를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국토교통 안전 강화에 5.9조 원 투자, SOC 적기 확충, 민생 지원, 약자 보호, 5극 3특 실현, 그러니까 균형발전에 1.6조 원, AI 신기술 응용시스템 상용화를 위한 지원 사업 신규,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 사업계획 수립 및 AI 미래모빌리티, 탄소중립 등 82개 국토교통 R&D 투자, 이렇게 제가 죽 봤는데 이외에도 국토부 소관 기금, 그러니까 주택도시기금하고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을 통해서 서민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한 주택 공급 및 금융 지원 그리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의 차질 없는 구축, 쇠퇴지역 복합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번 예산이 이재명 정부의 첫 국토부 예산이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안태준 위원 그런 만큼 국민의 안전과 건설경기 회복, 민생 안정, 균형발전, 미래 성장 등 5개 중점 분야에서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잘 집행·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안태준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주택 정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의 삶에 상당히 민감하게 체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축소를 한다든지 추가적으로 확대를 한다든지 하는 정책이 또 필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안태준 위원 그것들을 면밀히 잘 관리하셔서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더 질문을 준비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할 테니까 이것은 저희가 예산심의 때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과 부대의견 잘 달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신영대 위원님.

○신영대 위원 김윤덕 장관님, 오늘 국무회의 했잖아요. 참석 못 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2차관이 대참했습니다.

○신영대 위원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를 2035년까지 53%에서 최대 61%를 감축한다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했고 이게 의결됐다고 합니다.

역시 NDC 목표 상향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할 역할들이 있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신영대 위원 제가 볼 때 첫 번째로 교통 분야에서 어쨌든 탄소 절감에 대한 노력들을 최대한 많이 해야 될 거고.

두 번째로 하는 게 결국은 산업 부분이 있을 텐데 산업 부분은 산업부가 주로 역할을 해야 되겠지요, 사실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저희 국토부는 건축 부분이 많습니다.

○신영대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 하면 산업단지의 지정과 관련해서는 실제 국토부 소관이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렇지요.

○신영대 위원 그리고 나중에 산업단지 지정된 이후에 이걸 운영하고 지원하는 역할들을 산업부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현재 산업단지를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NDC의 목표에 근접할 수 있다,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축 목표에.

그러면 국토부가 그동안에 탄소 저감을 위해서 산단을 지정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신영대 위원 스마트그린산단을 지정해 왔어요. 그런데 지정했는데 결국은 스마트그린산단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친환경 개발……

○신영대 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제가 법안을 냈습니다.

○신영대 위원 다 기억 못 하실 거니까.

스마트그린산단 개발 계획, 에너지 사용 최소화 및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기업 생산 지원, 인프라 구축, 쾌적한 정주 여건 등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하는 사업, 온실가스 배출량 25% 이상 감축, 입주 기업과 기반·주거·공공·지원 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근처에 깔려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결국은 이 스마트그린산업단지가 RE100 산업단지로 넘어가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맞습니다.

○신영대 위원 그런데 지금 RE100 산업단지 관련해서 주관 부처가 어디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지금 현재 주관 부처는 산업부로 되어 있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고요.

○신영대 위원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산업부가 과거 같이 산업·통상·에너지가 포함됐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에너지가 넘어갔잖아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결국은 산업단지 조성된 이후에 이걸 지원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했는데 여기에 에너지 지원까지도, 재생에너지 지원까지 빠져 버렸어요, 산업부에서. 저는 아마, 국무회의에 가시면 이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재생에너지 자립도시라는 이름으로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신영대 위원** 저도 법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서 잘 검토해 주기를 바라는 건데요. 결국은 산업단지라는 것은 단지 기업이 입주할 공간만 조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관련해서 교통 인프라랄지 정주 여건 조성도 함께 하는 건데 이 부분에 플러스알파를 해서 결국은 RE100을 지원하는,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지원하는 게 RE100 산업단지가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국토부가 중심적 역할을 해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신영대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도 과거에 스마트그린산단을 지정해 놓고 정부 지원이 없어요, 기재부가 반대해서. 결국은 RE100 산업단지 관련해서 재정 지원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국토부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저도 그 부분들 법안에 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새만금공항 관련해서 오늘 국회 수석전문위원님 보고도 있기도 했고 했는데 뭐냐 하면 새만금국제공항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100대 문제 사업으로 규정하고 이것에 대해서 예산도 최소화하겠다고, 보완설계비 100억 정도만 반영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새만금공항이 왜 늦어졌는지는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신영대 위원** 실제 챔버리 파행 이후로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이 새만금 예산을 대폭 깎아서, 78% 깎았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국회 단계에서 한 50% 정도 복원을 했는데 복원된 예산도 수시배정으로 묶어 놓고 예산 배정 안 해 줬어요. 그래서 이게 늦어진 겁니다. 그런 과정에 지금 재판에서 기본계획 취소소송이 취소 판결이 난 건데, 지금 재판 대응 잘하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영대 위원** 제가 본 걸로, 조류 충돌 얘기하고 그러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들은 건설한 이후에 조류에 관련해서 다 저감장치를 해 놓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은 그냥 자연 상태에서 평가를 한 거니까 적절치 않은 이런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대 위원**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가덕도신공항 내년엔 착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 입장에서 가덕도는 되고 새만금공항 안 된다? 이런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예결산위원회 회의할 텐데 국토부에서는 정확한 입장을 가지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신영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황운하 위원님.

○**황운하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6년도 예산안 살펴보니까 주택 부문에서 과거와 다르게 큰 변화가 있더라고요. 주택 구입, 전세자금 융자 등 수요자 대출을 대폭 3.8조 원 정도 줄이고 또 임대주택 지원 출자 용자는 5.4조 원 증액시키고 이렇게 해서 수요자 대출을 줄이고 매입임대주택을 증액시켜서, 이 정책 목표가 됩니까? 집값을 조기에 안정시켜 보고자 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결국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운하 위원** 그렇지요. 사실 과거에 수요자 대출과 이차보전 이것이 정부 예산으로 집값을 떠받치는 역할을 했더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24년도에 주택담보대출이 1년간 60조가 증가했었는데 그중에 국토부 수요자 대출이 12.3조 원이었고 또 국토부 이차보전으로 인해 가지고 풀린 대출이 46조 원이어서 가지고 전체 주담대 증가분 중에 정부의 정책 대출이 97%를 차지하는 과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맞습니다.

○**황운하 위원** 이것이 결국은 국민에게 대출을 부추기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대출 예산을 많이 줄이긴 했는데 더 과감하게 줄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또 이차보전 올해 예산이 무려 2조 원에 달하더라고요. 이차보전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차보전을 줄일 방안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동의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 문제의 본질과 대책은 충분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다만 어떤 시장 상황이라든가 또 국민들의 충격을 고려해 볼 때 약간은 연착륙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정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황운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임대주택 지원 예산을 많이 늘리긴 했는데 다가구 매입 임대 같은 경우에 노후 지역, 비역세권 저층 주택을 매입해 가지고 재임대하는 구조다 보니까 청년층들이 별로 선호하는 정책이 아니라 하더라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인기가 없습니다.

○**황운하 위원** 그러면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한 뭐 대책이 있습니까?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해서는 과거에 행복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청년들이 선호했는데 이거 행복주택 예산은 줄었잖아요? 왜 줄이고, 청년 주거 정책 대책이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주거복지가 줄었다고 보기는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것들은 거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황운하 위원** 청년 월세 지원이 늘었더라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월세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청년들이 선호하는 지역 스타일들이 또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 진행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대출도 청년들한테는 신생아라든가 청년 또 이런 분들에게는 거기에 맞춰서 대출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운하 위원** 그래서 행복주택을 더 확충할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저는 뭐 그런 방향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황운하 위원 청년들한테 인기가 좋았잖아요, 행복주택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운하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줄었어요. 어쩔 수 없이 금년에는 줄었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황운하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늘릴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좀 그건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사한 형태의 지원이 전체적인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 전체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일부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파악을 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황운하 위원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하고.

장관님, 불법 취업한 외국인 배달 라이더가 뭔지 잘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황운하 위원 이게 금년에 399명 이렇게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배달 라이더, 라이더유니온들이 아마 국토부하고도 대화를 했을 것 같아요. 배달 단가가 3000원 이상이었는데 2000원 이하로 떨어지고 또 외국인들이 뺑소니 사고도 하고 무보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됩니까,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 배달 라이더 문제는 법무부가 주관 부처로 되어 있고요. 다만 저희 국토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게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데 이미 시스템은 거의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따른 어떤 조치들이 남아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잘 완성시켜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황운하 위원 그러니까 어플에서 안면인식이 작동되도록 그것을 준비하고 있나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이미 시스템은 거의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황운하 위원 그게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한 열 분 이상 남으셨는데요. 가능한 한 저희가 오후 회의를 하지 않고 오전에 조금 늦더라도 오전에 회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태 위원님.

○이건태 위원 부천시병 출신 이건태 위원입니다.

장관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때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HUG가 사업 승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국민들이 굉장히 큰 걱정을 했었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이 3370억 원만 편성됐다가 추경 때 3968억 9500만 원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4532억 9500만 원으로 최종 수정 집행됐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거 집행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은행권을 알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혼란이 많았습니다.

내년도 우리 기금운용계획을 보니까 4410억 6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전년에 실제로 수정 집행된 금액과 대비해서 122억 8900만 원 축소 편성됐거든요.

2025년처럼 본예산 편성 이후에 추경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뒤늦게 사후보완식 대응할 게 아니라 적어도 작년 수준의 예산은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준 122억 8900만 원 축소 편성된 것을 회복해서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사업장별로 용자 수요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건데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또 추경 때 늘리고 이런 것보다는 최소한 작년 기준으로 확대된 기준으로 하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 당국하고 저희도 또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건태 위원** 경인선 지하화 관련해서 여쭙보겠습니다. 국감 때도 장관님께 한번 여쭙봤었는데요.

금년 말에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 수립·고시될 걸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감 때 말씀드렸다고 서울에서 부천·인천 경인선이 끝까지 지하화가 연결돼야 되는데 부천·인천이 낸 사업 계획안과 서울시가 낸 사업 계획안이 중간에 분절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잘 조정해서 가지고 분절 구간이 안 생기도록 합리적인 접속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워낙 큰 사업이고 지자체한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 수립과 종합계획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할 때 지자체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재원 분배 구조 또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범위 내 국세나 또 광역 지방세 등에 대한 조세 감면 또 철도지하화 통합계정 신설 등을 통한 재투자 방안 등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국유지 매각 가치가 높은 지역 그러니까 이르면 서울 이런 지역의 수익과, 그런 수익과 현금 흐름을 매각 가치가 낮은 지역의 철도지하화 재원으로 지원하는 교차보전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경인선이라고 하면 결국 서울에서 인천 끝까지가 한 노선이고 그게 다 국가 소유의 토지인데 이걸 사업 가치가 높은 지역의 수익과 사업 가치가 낮은 곳의 수익을 그냥 끊어서 생각하면 사업이 지자체에 따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그렇단 말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이런 교차보전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현재 위원님 말씀처럼 조세 감면 문제나 교차보전 문제는 저희 국토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문제는 행안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꼭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경인선은 어쨌든 전체적인 한 노선으로 보고, 수익률이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합리

적으로 조율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건태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 위원 예산 관련 질의를 준비했는데 이거는 서면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10·15 대책의 9월 통계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을 봤거든요. 봤더니 조정대상지역 지정일이 속하는 달, 10월 16일 날 지정하니까, 10월이지요. 10월 바로 전달부터 소급해서 3개월 간의 통계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이종욱 위원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만약에 통계가 있었다면 7월, 9월 거를 썼겠지요. 그렇지요? 9월 통계가 있었다면.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렇지요, 9월 통계가 있었다면……

○이종욱 위원 있었다면 썼겠지요. 그런데 없었기 때문에 6월·8월 통계를 쓰라고 이 법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이종욱 위원 그 전달 것을 해도 된다고 돼 있지는 않아요. 시행령에 바로 전달부터 소급한다고 표현이 돼 있지, 취득 가능한 통계부터 석 달이라고 안 돼 있고 바로 전달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문구 해석을 하면 10월의 바로 전달이니깐 9월, 8월, 7월 하는 게 일단 문구 해석상으로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국토부 입장을 십분 이해한다고 하면 이 통계가 안 나온 상태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돌렸잖아요. 그렇지요? 안건을 돌려 가지고 논의를 하다가 아까 장관님께서 통보를 받았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지요? 통보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요청을 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부동산원에서 저희한테 보냅니다.

○이종욱 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하려면 이 법을 보면 지정일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이니깐 6월·9월을 해야 되는데 9월이 없으니깐 5월·8월을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통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 포인트고 그러면 당연히 언제 줄 수 있냐, 우리가 최소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고 요청을 했을 것 같은데 장관님이 그냥 통보받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셔서 가지고……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니요, 부동산원에서 사무관 이메일로 보낸다고 합니다, 월 통계 자료에 대해서……

○이종욱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돌렸고 안건을 검토하는 중에 알게 됐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이종욱 위원 알게 됐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니요, 알게 됐다는 표현은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핵심 쟁점은 뭐냐 하면요 그 통계 자료가 활용 가능한 자료인지 활용할 수 없

는 자료인지 법상으로 공표 이전에 통계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점.

○**이종욱 위원**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통계법 27조 2항 보면 작성 중인 통계는 공표 전 제공할 수 없지만 관계 기관이 대응이 시급하거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돼 있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요청하면 허용할 수도 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그러면 제가 변호사도 아닌데 그런 법적인 문제에 대한 법리적 해석 문제라면 차라리 재판부로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종욱 위원** 아니, 그런데 부동산원 통계 만드는 사람들 이거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만 모르는 거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돌리는 와중에 아니면 이거 발표했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최종 서면 의결 결과를 다 놓고 취합을 할 때 이게 전제 조건이 잘못됐구나 이거를 다시 재심의를 돌리거나 아니면 일부 내용을 바꿔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실무자는? 그걸 그냥 합니까, 틀렸는데.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실무자는 그런 통계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현재 선배들이 징계받고 수사받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아니야, 그러면 두 가지 대안이 있어요. 6월·8월 통계로 그냥 강행하는 대안이 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강행이 아니라……

○**이종욱 위원** 잘못됐구나, 7월·9월 통계로 해서 일부 조정하거나 재심의를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대안이 2개가 있습니다. 어느 게 합리적인 행정입니까? 저는 후자가 훨씬 합리적인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간단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조정대상 지역에 들어가면……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니,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냐 합리적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 불법이냐 아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정확히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걸 치유할 기회가 있었다는 거지요, 치유할 기회가 있었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국민 재산권에 엄청난 제약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 조항 자체가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제를 가진 제량 조항으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치유할 수 있었고 지금이라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당장 해제하는 것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돌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게 됐잖아요, 지금. 뭔가 전제조건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금 못 돌린다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로 규제지역을 추가하거나 축소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늘 시장 상황을 보면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래도 이 10개 지역은 지금 현 상태에서 돌아보면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해제하는 작업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천준호 위원님.

○천준호 위원 서울 강북구갑 출신의 천준호 위원입니다.

장관님, 서울 내 약 1054개 정도의 정비사업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된 세대수가 약 81만 호에 달하는데요. 문제는 구역 지정 이후에 사업이 멈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주택공급의 걸림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은 주택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취지지만 신통기획으로 지정된 224곳 중에서 실제 착공에 들어간 곳은 주택을 기준으로 단 1건도 없습니다. 0건입니다. 이름은 신속이지만 현실은 신통치 않은 공급 정책인데요. 정책의 원인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조합 설립 단계의 갈등 그리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 심의 과정에서의 행정병목의 심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서울시가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미비하고 조정이 부재하고 지원 체제가 부실하면서 이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 신통기획은 정책홍보형에 불과하고 주택공급 효과는 매우 부실하다라는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 종합감사에서도 주택공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 규모별 권한을 자치구로 분산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가 있었습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치구가 직접 관리·조정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서울 내 정비사업 중 80%가 10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사업이지만 전체 공급 물량이 28%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자치구가 충분히, 25개 자치구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소규모 사업의 구역 지정과 심의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한다면 대신 서울시는 사업의 80%가 줄어들고 행정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입니다. 동시에 대규모 사업과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상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행정력을 충분히 집중하면서 결과적으로 정비사업 전반의 속도를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의 권한을 서울시가 독점하기보다는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행정병목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라도 권한의 분산과 행정력 비중을 병행하는 행정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천준호 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제가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개정을 통한 권한 이양 방안입니다. 서울시가 행정병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서울시 스스로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0조에 관한 위임과 관련된 조항이 있는데요. 정비구역 지정 권한과 도시계획의 심의 주체를 특별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위임하는 조례를 신설해서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하면 서울시 행정 부담은 줄고 지역맞춤형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에 속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방안이 하나입니다.

만약에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방법은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도정법 개정을 통해서 권한을 이양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법 개정을 통한 방안인데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특별자치시장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특별시의 자치구청장만 유일하게 제외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50조제1항 사업계획의 통합 심의의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심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통합 심의에 대한 권한도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이.

그래서 도정법 개정을 통해서 지정권자를 구청장까지 확대를 한다면 지정 및 심의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할 수 있게 되고 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병목 현상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서 행정 권한의 분산과 집중을 병행하고 이를 위해서 서울의 정비사업 행정병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치구로의 정비사업 권한 이양을 통해서 주택공급의 정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전향적인 협의를 좀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지난 성동구 현장 방문했을 때도 서울시 주택실장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오세훈 서울시장님을 제가 만나기로 돼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상정해서 이 정비사업의 속도가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권한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마무리 잘해 보도록 하겠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잘 안 될 경우에는 법을 바꿔서라도 국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서울시 정비사업이 정말 속도감 있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천준호 위원 본 의원실에서 필요하다면 관련 도정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차원에서도 같이 협의를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전용기 위원님.

○전용기 위원 부동산원장님 앞으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손 원장님.

3분만 쓸게요.

○위원장 맹성규 예, 좋습니다.

○전용기 위원 원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원에서 통계 낸 것 미리 사전에 공표하거나 사전에 사용하면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한국부동산원장 손태락 저희들은 제출만 할 뿐이지 저희들이 사전에는……

○전용기 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피해 가려고 하지 마시고. 맨날 그런 식으로 피해 가려고 하니까 질문이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쓰면 돼요, 안 돼요? 그것만 말씀 주세요.

○한국부동산원장 손태락 안 됩니다.

○전용기 위원 사전에 쓰면 불법이지요?

○한국부동산원장 손태락 예, 그렇습니다.

○전용기 위원 과거에 문제 있었던 것 정확하게 부동산원에서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지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부동산원에서 통계만 제공하지만 그것을 사전에 공표하거나 사전에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위법이다, 맞습니까?

○**한국부동산원장 손태락** 예.

○**전용기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들 중에 민간인도 있지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전용기 위원** 그 민간인들한테 이 통계를 미리 줘 가지고 심의에 사용해 달라 하고 할 수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러니까 민간인이나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통계자료는 어떤 의사결정의 쓰임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공표 이전에는.

○**전용기 위원** 그게 사전에 사용하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전용기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불법을 조장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에서는 미리 받아 가지고 미리 적용시켜 가지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미리 받아 가지고 미리 적용시키고 미리 민간인도 포함돼 있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들한테 줬으면 그것 불법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불법을 종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무법지대였나 보지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법을 행해서 국토부 공무원들이 감옥에 가거나 불법을 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그래서 그 시점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지금 행정소송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는 것에 국토부가 휘둘릴 필요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어쨌든 국토부에서 이번 문제뿐만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법을 철저히 준수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용기 위원** 기록을 정확하게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장난처럼 들리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예결위도 봤는데 거기에서도 사실과 거짓을 굉장히 혼돈해서 쓰시는 것 같은데 그들의 주장처럼 하다가는 불법을 조장하는 겁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불법을 종용하는 것은 장관께서 정확하게 끊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전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정준호 위원** 장관님, 지난 질의 때 제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대한 투기 의혹 말씀을 드렸고 국토부에서 철저하게 조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투기 의혹에 대해서 11월 3일 날 당사자의 해명이 있었습니다. 해당 토지 주말에 처분했다, 계약 해지했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해명된 것 하나도 없고 여전히 국토부에서 조사하셔야 되고, 특히 이해충돌과 관련된 예산 증액 문제를 제가 강하게 질타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었습니다. 화곡리 1-47번지 해당 토지에 대한

18년 9월 8일 자 처분 문서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PPT.

(영상자료를 보며)

계약서를 보시면 문서상은 장동혁 대표도 거래 당사자로 돼 있고 1억 6900 이렇게 해 가지고 3명이서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문서상으로는 배우자 단독소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3명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차명거래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명백합니다.

그다음에 장 대표도 이렇게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동소유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배우자 단독 소유로 신고를 했지요. 이것도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배우자는 2020년 3월 달에 해당 토지를 소유권 신고했는데 현재까지 5년이 훨씬 지나도록 미등기 상태입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2조 1항에 보면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할 것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이 처분 문서상에 보면 2020년 8월경에 매매 완결이 된 것으로 본다고..... 계약서 띄워 주세요, PPT. 2020년 8월경에 매매 완결이 된 것으로 본다고 했고 60일 이내 해야 되니까 2020년 10월경에는 했어야 되는데 5년이 지나도록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재산신고 가액만 놓고 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이 해당 토지에 대해서 6억 1000만 원인가 해 가지고 동일한 가격으로만 신고를 하고 있어요. 2021년도에 지목이 변경돼서 임야에서 창고용지로 변경한 걸 보면 이것은 재산가액을 과소 신고한 것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그다음에 또 특이한 것은요, 계약서 다시 띄워 주세요. 처분 문서 4항에 보면 관련된 거래 관련 비용을 대산도 아니고 제3의 업체인 수반건설이 부담한다라고 돼 있어요. 아무 상관없는 수반건설이 등장합니다. 수반건설과의 이면합의가 존재한다는 거고 장 대표는 해당 비용 상당에 대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배임수재죄가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항공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에 해당하는 처분 문서를 작성했는데 이 땅은 2019년 3월경에는 아무런 작업이 되지도 않았고 2019년 11월이 돼서야 땅 작업이 돼요. 임야 정비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이런 거래를 왜 했을까? 지역업체가 개발 정보를 사전에 제공을 하고 현직 판사였던 장동혁 대표에게 청탁성 거래를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대목입니다.

저희가 제보를 몇 개 받았습시다. 2018년 저희가 보여 드린 이 처분 문서, 장동혁 대표가 현직 판사 신분인데 해당 종이 프린트해서 직접 가져와서 도장 날인 받아 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장 대표 부부 모두가 현직 판사인데 이 거래, 이 계약서 작성 안 해 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강압적으로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제했다고 지금 해명했잖아요. 웃긴 게 해제 후에 관련된 대금은 현금으로 돌려 달라고 했대요. 왜 현금으로 돌려받겠습니까? 이것 자체도 배임 소지가 있어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다음 PPT.

같은 화곡리 1-47번지 인접해 있는 같은 마을 36-76·77 이렇게 두 가지 토지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토지를 보면 여기서도 역시 아까 비용 부담하기로 했던 수반건설이 등장합니다. 16년 3월에 수반건설이 매입한 이후에 두 달 뒤에 제삼자한테 파는데 그러고 나서 3년 뒤에 2019년 4월 30일 날 수반이 이걸 다시 매입을 해요, 판 땅을. 그런데 4월

30일 당일 날 바로 장동혁에게 매도를 해서 등기를 넘겨줍니다. 이것만 봐도 정상적이지 않지요.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 하면 두 달 뒤에 2019년 7월, 수반건설은 사실상 부도가 나 가지고 수반 모든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가 들어옵니다. 장동혁은 수반건설의 부도 위험을 인지하고 뭔가 서둘러서 정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까 1-47번지 토지를 등기를 5년 이상 안 했던 것하고 너무나도 대조가 됩니다. 이게 맞다고 하면 장동혁 대표는 채무 면탈과 관련된 혐의가 존재하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반건설과의 이면 합의가 존재합니다. 이 부분까지 언급을 하고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동혁 대표는 해명이 되는 겁니다. 국토부도 이것 면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김종양 위원님.

○김종양 위원 창원특례시 의창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종양입니다.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우리 정치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낮 두꺼울 수 있을까, 정치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카멜레온처럼 변신을 자주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허탈하고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면 잘 아시겠지만 특활비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사실 얼마나 특활비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많이 정치인들이 떠들었습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갖다가 기망한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해 전부 다 부활됐잖아요. 복원 다 됐잖아요. 이전보다도 오히려 더 증액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예산 심의하면서 어떤 조직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기본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까지도 주지 않았잖아요. 생수 사 먹을 돈도, 복사지도 우리가 예산편성 해 주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올 예산을 보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보은성·선심성 이런 예산 특활비 다 부활, 특활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 없어도, 그것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나 하는 등등의 극단적인 어떤 표현을 써 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지금 상황이 바뀌니까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다 그래서 다 복원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최소한으로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라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장관께서도 당연히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되셨는데 이번에 우리 예산안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구하기에 앞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오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많은 기간이 소요된 게 아니잖아요. 몇 개월 전이었잖아요. 그래 놓고

이 예산에 대해서 협조 요청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사과라도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김종양 위원 그래도 장관님 현재 국무위원이시고 당연히 지난해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반대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넘어가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고 잘못된 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치인들 잘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하여튼 너무 쉽게 입장을 바꾸는 것 같아 가지고 저도 정치를 시작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될까 싶어서 너무 두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AI 관련해 가지고요 간단히 국토부 예산과 관련해서는 AI 관련한 예산을 한번 여쭙보겠는데 저도 얼마 전에 중국 청도하고 충칭을 갔다 왔습니다. 저도 중국의 성장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참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이 저렇게 급속도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동인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저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양 위원 정부의 그런 전폭적인 지원, 물론 사회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통제·관리에 있어 가지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보다도 훨씬 더 앞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결국 중국이 이렇게 된 건 경쟁하고 보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은 지금 철저하게 경쟁을, 모든 걸 서열화시키잖아요. 아주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지원을 해 주고 학교도 마찬가지로, 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경쟁을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이 되기 위해서 저렇게 애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폭적인 보상을 해 주니까 중국이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경쟁도 없애 버리잖아요. 그리고 능력에 따른 보상도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곧 중국에…… 자칫 잘못하면 하여튼 중국이 끼어 가지고 제대로 제 역할 못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AI 관련 예산도 많이 편성을 하셨던데 이번에 제대로 된 분석·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다소 조금 회의가 들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번에 편성된 예산도 지금 많잖아요. 새로 신규 편성된 사업도 지금 한 3개 정도 돼 가지고 예산도, 집계 안에 예산이 지금 요청을 하셨던데 하여튼 이런 예산들이 제대로 잘 사용되어서 하여튼 우리 교통·국토 분야의 AI 산업이 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이연희 위원님.

청주시흥덕구 이연희 위원입니다.

먼저 PPT 잠깐 띄워 주시지요.

서울 집값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PIR이라고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을 나타내는 GPU가 있는데 서울이 8월 달에, 도이체뱅크에서 발표를 했는데 8월 달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집값이 세

계 4위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데 그 PIR이 26배나 된다고 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26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서울 집값이 매우 거품이 끼어 있고 특히 최근에 들어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2022년부터 시작된 공급절벽,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공급절벽으로 인해서 그리고 유동성이 확장되면서 집값이 폭등하는, 그래서 정부 대책은 이런 가격·수요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10·15 대책을 발표한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이연희 위원 그래프를 한번 보시지요.

그래프를 보면 언론들이 주로 사용하는 KB국민은행의 주간지표인데 10·15 대책 이후에 수도권, 전국도 그렇고 가격지표가 확 꺾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일단 과열 양상은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그다음에 수요자들도 이제 기다리면서 관망하는 그런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정화 단계로 들어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주택 공급 물량에 대한 확실한 실효성이 있는 대책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격에 대한 신뢰성 있는 조치 이런 것들이 공급대책에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것을 준비하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지금 공급대책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가 또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래서 지금 야당 일각에서 부동산정책에 대한 흔들기가 집요하게 시작되고 있는데 흔들리지 마시고 중심을 잡고 공급과 가격에서 국민들이 기다리면 나에게 기회가 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이연희 위원 예산과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보니까 세종 국회의사당하고 대통령 집무실 예산 집행이 예정된 대로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행정수도 관문인 청주국제공항의 중요성이 더 커지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이연희 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이용객이 480만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공항종합개발계획의 5차 예측치가 225만이었고, 6차 예측치가 335만이 있는데 이것을 이미 초과를 했어요. 그만큼 청주국제공항 이용객이 폭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슬롯을 더 늘려야 되는데 지금 청주국제공항은 아시는 것처럼 군공항과 함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추진이 지금 매우 필요한 단계이고 그래서 민간 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을 위해서 사전타당성조사에 준하는 공항개발조사 용역연구비 5억 원 증액을 강력히 요청드리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리고 CTX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민자 적격성이 통과된 것은 보고받으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이연희 위원 그런데 문제가 이게 임대형 민자사업, 그러니까 BTL 사업은 한도액이

설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11월 달에 민자 적격성이 통과되면서 BTL 한도액은 8월 달에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후속 작업이 되려면 제삼자 권고안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예산 심의할 때 BTL 한도액 1조 7000억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이게 민자적격성 통과한 이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랄지, 제삼자 제안공고랄지 이런 것들을 예정대로 하려면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한 의견도 얘기를 해 주시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이연희 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손명수 위원께서 자율주행 얘기했는데 올해 국토부가 제출한 예산이 94억이에요. 이것 가지고 자율주행할 수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죄송합니다.

○이연희 위원 중국도 다녀오셨는데 중국 정부가 자율주행의 선두에 서게 된 성공 이유는 저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혁신적인 규제 해제 그리고 과감한 시범운행지구 확대 이렇게 보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희 정부에서도 게임 체인저인 AI가 등장했기 때문에 늦었더라도 AI를 활용해서 자율주행에서 3장에 들 수 있는 토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예산 과정에서 자율주행 이번에 따라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번 예산심의할 때 정부에서도 자율주행과 관련한 예산, 정부에서는 한 8000억 정도 예산을 하고 있던데 이런 부분이 이번에 반드시 예산증액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자율주행 관련해서 예산 증액에 대해서 특히 국토부는 최선을 다하겠고요. 국토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정말 관심과 애정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CTX 관련 민자 BTL 한도액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꼭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배준영 위원님.

○배준영 위원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 배준영입니다.

장관님, 제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강화에 가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안 가 봤습니다.

○배준영 위원 강화에 한 번도 안 가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한번 꼭 가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한번 꼭 오십시오. 좀 있으면 고속도로 착공식이 있을 텐데요 그때 오셔도 좋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배준영 위원 신촌 오거리에서 강화버스터미널까지 안 막히면, 하나도 안 막히면 55분

이면 갑니다. 그런데 보통 때 얼마 걸리는지 아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모르겠는데요.

○배준영 위원 2시간 20분 걸립니다. 정류장이 30개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보시면 사실 강화가 인천시기는 하지만 인천광역시 주민들은 28%, 서울특별시 주민이 24%, 나머지 국민들이 많이 오는데 55분이면 가는데 2시간 20분 걸리면 되겠습니까?

저는 교통이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배준영 위원 그래서 이게 N버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N버스를 하게 되면 정류장이 12개로 줄어들고요 훨씬 빨리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광위원장님 안 계신데 제가 대광위 위원장님께는 한번 말씀드렸는데 ‘55분이면 갈 수 있는데 2시간 20분이 걸리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서울시 국감에서 오세훈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N버스가 서울하고 강화 간에 오가면 서울 또 말하자면 동의를 해야 되는데 동감을 표시하고 동의하실 것 같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 장관님으로서 한번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신지를 여쭙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오세훈 시장 만나려고 했으니까요. 일단 지금 인천시 제출했고 또 서울시랑하고 대화해서 가능한 한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도와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배준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항이 있습니다, 공항. 왼쪽 뒤에 멋진 공항 사진이 있기는 한데, 사실은 멋지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장관님,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응급환자들을요—대부분 30km가 다 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하대병원도 그렇고 성모국제병원도 그렇고 다리 건너서 한참 건너는데 골든타임을 다 놓쳐요. 그래서 지난 3년간 한 6000명 정도의 긴급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의 15% 정도는 KTAS 1·2라고 그래 가지고 정말 생명이 위급한,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급한 사람들이 15%나 되고 올해 상반기도 1200건 응급환자 중의 한 25% 정도, 4분의 1 정도가 그런 KTAS 1·2단계였습니다.

그런데 도쿄의 나리타공항이나 런던의 히드로공항, 대부분의 큰 공항들은 다 6~7km 내에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대규모 재난훈련이라든지 감염병 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하고 그러실 텐데, 정말 운이 좋아서 이십수 년 동안 사고가 안 일어나서 다행이지 일어나면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공항뿐만 아니라 공항권 인근 주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의료법을 고쳐 가지고 인천공항공사에서도 출자를 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보훈병원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단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의료법도 고쳐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또 병원을 유치하는 건데 제가 서울대병원 등등 해 가지고 큰 병원들과 몇 군데 얘기를 해 봤는데 결국은 편당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국토부가 중심이 되어야 되겠지요. 국토부, 보건복지부, 인천시 그리고 관련된 기관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정말 장관님이 계실 때 시작을 해 놔야지 안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기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께서도 인천공항공사 국감에서 그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것 정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저희 국토부 차원에서 소위 말하면 공항 인근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TF 형식으로 해 가지고 정식으로 제안하고요. 거기에 대한 준비작업을 해서, 어쨌든 지금 인천공항의 예산이 아예 없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배준영 위원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렇다면 정책적인 것이 진행이 되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고요.

또 인천지역 의원님들, 우리 국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같이 협업,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배준영 위원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앞장…… 만약에 사고 나서 또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도 우리가 못 하면 또 가슴아프고 그럴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위원님 말씀에 너무나 많이 공감한다는 말씀 올리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TF가 빨리 만들어져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수도권에서 가볼 만한 곳 중의 하나가 강화거든요. 나중에 시간되시면 하루 정도는 가서 주변도 한번 둘러 보시고 하셨으면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혹시 오시게 되면 배 위원하고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위원장 맹성규 다음, 김정재 위원님.

○김정재 위원 포항 북구 김정재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순서 바꿔 주신 박용갑 위원님 감사합니다.

장관님, 지난 국감에서도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영일만 횡단대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영일만 횡단대교 사업은 국책사업입니다. 국토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설계비, 보상비 등으로 285억 원 정도를 지금 반영해 두었고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으로는 본사업을 추진력 있게 추진력을 가지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 예산에 1850억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굉장히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속히 마무리되고 설계 또 보상, 착수까지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 꼭 좀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정재 위원 그리고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주민 수용성입니다. 그래서 국토부 차원의 공청회든 공식적인 소통창구를 통해서 지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꼭 배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제가 봐도 주민들 의견에 나라도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심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꼭 해 보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KTX 포항역인데요, 여기가 지금 철도이용객이 굉장히 급증하고 또 임시공영주차장이 완전히 폐쇄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지난해에 국도철도공단이 주관한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이었는데 여기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포항역 후면부에 있는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 확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차장과 포항역 사이에 기차선로가 지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연결하는 브릿지, 연결통로가 필요한데요. 이 건립 예산이 약 44억 원인데 국비로 지금 반영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좀 반영을 요청드리는데요. 현재 국가철도공단은 타당성 용역결과가 좀 낮다, 경제성이 낮다라는 이유로 좀 꺼리고 있습니다라는 기재부는 이 해당 사업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공공성이 있다 이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선상 연결하는 통로사업에 국비가 투입된 사례가 몇 개 있습니다. 경부선의 상동역 보도육교 및 승강설비 설치사업도 그렇고요, 또 서울 외대역 앞에 선상테크 설치사업도 국비가 들어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연결통로에 국비가 좀 투입될 수 있도록 꼭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쉽지는 않겠지만,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를 좀 써 주십시오. 사실 지역에서는 이 20~30억이 참 중요하거든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정재 위원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의 국도7호선 달전 5거리 병목지점 개선사업에 대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면 4차선인데요, 한쪽 차선이 굉장히 지금 막혀 있습니다. 여기가 국도7호선인데 달전 5거리라는 데입니다. 여기와 영일만대로를 잇는 달천교 주변입니다. 이 지역의 바로 가까이에 KTX 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혼잡하고 기차를 놓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제가 왜 그러냐 하면 영일만대로에는 6차선이 합류하고요, 그다음 4차선 달천교를 지나면 다시 7차선으로 넓혀집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2022년에도 4건, 2023년에 이 자리에서만 6건, 24년에도 2건, 그래서 최근에만 한 12건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 설상가상 여기에 아파트가 한 1만 세대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이 가중될 건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달천교 4차선을 7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국도 위험도로 병목지점 개선 7단계 변경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꼭 이 달전 5거리 병목지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이 7단계 병목지점 개선사업이 내년 3월 정도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만약 들어가게 되면 예산에 투입되고 하는 게 빠르면 내후년부터나, 그런 과정으로 간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예, 그래서 오늘 부탁 말씀은 이게 꼭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은 아니지만 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사업에 꼭 포함될 수 있도록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갑 위원님.

○박용갑 위원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박용갑 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서대전 분기점에서 회덕 분기점까지 기재부에서 예타 통과된 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 위원 이게 18.6km인데 6차로로 확장하는 건데요, 예타 통과하기 전에 사실 국토부에서 국회에 예산서를 올리는 데 빠졌어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박용갑 위원 전이기 때문에 빠졌는데 이 예산을 좀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3억 4100만 원인데 그래야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재부와 협의해서, 여기가 굉장히, 하루에 평균 6만 9000대가 다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저도 여기 자주 다녀서 잘 압니다.

○박용갑 위원 그렇지요. 잘 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속 40km~50km 이 정도 되는데 이건 꼭 이번에 좀 반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하여튼 기재부하고 잘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용갑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22대 국회 들어와서 처음 얘기한 게 영세민 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약 12만 7000세대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에어컨 놔 주는 것을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연차적으로, 제가 2027년까지 완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 여기에 사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연세가 많으시고 또 몸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염이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생활하는 데 하루라도 좀 편리할 수 있도록 에어컨 설치를, 그동안에 LH에서 많이 계획들을 하고 있는데 2028년까지인데 2027년까지 좀 당겨 줬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사실 정부가 그동안에는 85%를 지원했고 그다음에 LH가 15% 지원했었어요.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2016년에 50 대 50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그러니까 LH 노후공공임대주택아파트가 시간이 지나니까 굉장히 노후화됐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설개선비가 더 들어가는데 LH가 이것을 다 충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런 에어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지장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기재부하고 얘기를 해서 다시 박근혜정부 전에 했던 85 대 15로 해서 정부지원이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박용갑 위원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박용갑 위원 또 하나는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인데요. 이자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산화탄소 줄이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시작했던 건데 2024년, 25년 다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구도심에 보면 노후주택,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중창을 해 주고 해서 이자 지원사업을 해 가지고 그동안에 한 6만 263동 그러니까 상가도 있고 주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 7만 8000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감량을 했습니다. 그게 자동차가 1년에 약 1500대 정도가 내뿜는 이산화탄소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해서 이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끝나고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갑 위원 예,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게 뭐가 있느냐 하면 제가 단체장을 할 때 빈집 정비사업을 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했는데 빈집 정비사업이 한 동네에 사실 현 집들이 그냥 그러니까 집주인이 누군지 계속 수소문해서 또는 외국에 살고 있어서 연락도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을 저희들이 한 채 하는 데 한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이것을 다 철거해 주고 여기에 꽃밭이나 텃밭 해서 그 동네 주거환경이 굉장히 쾌적한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해서 행안부에서 좋은 평가도 받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정부가 조금씩만 지원해 주면 동네 한가운데 들고양이라든지 청소년 우범 이런 것을 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기

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장님, 박용갑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린리모델링 관련해서 답변 겸 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보고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말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맹성규 예, 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박용갑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현재 중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는 건 너무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이번 탄소중립 관련해서 우리가 탄소감축에 대한, 53%~61%로 일단 구간을 정해서 결정을 했는데요. 저희 국토부가 저감정책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해야 될 일이 결국 내연기관차의 탄소를 줄이는 것 또 건축물에서 탄소를 줄이는 게 핵심적인 과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국토부가 최대한 해서 지금 자동차 생산량이 별로 안 되지만 여기를 거의 배 이상 늘리고 이런 정책을 해도 저희들이 51% 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현재 국토부의 고민입니다.

어쨌든 53%~61%로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탄소감축에 대한 최소 53%를 만들어 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그중에서 핵심적인 것 중의 하나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다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공공 그린리모델링 사업 2.0이라고 해서 예산이 거의 2배 증액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자 지원도 안 되는, 오히려 문제는 이자 지원뿐만 아니고 민간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산할 때 5년 동안 약 120조 원이 추산되고 여기에 30%를 지원하면 40조 정도의 지원이 된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린리모델링 민간 부문에 대해서까지, 이자 지원뿐만 아니고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지 않으면 이번 NDC 감축 53%에서 61%를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좀 심하게 말하면 국민적으로 굉장히 속이는 그런 경우까지 갈 수 있겠다 싶어서 국토위원님들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번 국회 증액 단계에서 꼭 증액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박용갑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범 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영진 위원님.

○권영진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구·광주에 있는 달빛철도요 이게 특별법 제정되고 국토부에서 예타면제 신청 요구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상임위에서 장관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연내에는 해결이 됩니까, 예타면제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정말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들 국토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이번에 예산의 부대의견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국토교통부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달빛철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연내에 예타면제 확정을 받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런 부대의견이라도 달아 주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지금 기재부장관한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리고 장관님도 몇 번 동의하셨고 제가 국정감사에서 LH 영구임대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예산 꼭 반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장관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라고 하셨고 지금 예산 심의하는데 많은 위원들도 이것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장관하고 한번 협의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전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기재부장관이 요청한 것은 좀 난제사업 있지요, 난제사업만 뽑아서 지금 기재부장관하고 다시 할 생각이고요.

다만 기재부에서는 약간 반복적으로 지방사무에 속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권영진 위원 지방사무가 아니지요. LH 소유인데 어떻게 그게 지방사무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맞습니다. LH……

○권영진 위원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지금 시작 안 하면, 지금 시작해도 1년에 한 10개씩 하면 아주 급한 것들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길 바라구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권영진 위원 그다음에 싱크홀과 지반침하 예방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국비 30%, 지방비 70% 매칭 사업으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하고 있어요.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권영진 위원 그런데 작년도 국비 예산이 52억 편성됐는데 올해 30억으로 줄었어요.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장관님 보고할 때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싱크홀…… 그런데 오히려 국비 예산을 줄여서 되겠습니까? 이거는 원상회복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리고 장관님, 국토부 10·15 대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있고 또 장관님 평소와 달리 언성까지 막 높이셨는데요.

10·15 대책을 꼭 10월 15일 날 발표했어야 됐습니까? 이게 법령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책적인 판단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정책적인 판단입니다.

○권영진 위원 판단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권영진 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금 주택법에도 조정대상지역이나 규제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제라는 것은 국민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권영진 위원 그러니까 정부가 쓸 수 있는 칼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시행령에 보면 바로 전달까지의 통계를 하도록 돼 있던 말이에요. 그러면 10월 15일 날 발표를 한다고 하면 그 전달, 9월 달 통계까지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위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장관님께서도 위원들이 이 얘기를 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10월 15일 날, 통계를 공개할 수 있는 날 발표를 하셨는데 주택가격 통계 보는 것하고 내가 규제지역에 묶여서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10개 지역에 270만 명이나 있던 말이에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도, 대출 제한도 강화됐지요, 이주비 대출도 제한됐지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서 재건축도 어렵게 돼 있는,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있으면 적어도 장관님께서 이런 문제 제기하시면 ‘저희가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10월 15일 날 했고 그때 발표하려고 하다 보니까 9월 달 통계는 활용을 못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270만 명의 국민들이 억울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도는 얘기하시는 게 원칙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맞습니다.

위원님, 제 말 끊지 않고 제가 좀 말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영진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장관님께서 오늘 위원들 질의하실 때도 너무 과하게 답변을 하셨어요, 화를 내시면서. 마치 질의하는 위원이나 누가 국토부 공무원들을 통제로 인해서 수사받도록 만들었지 않냐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은, 장관으로서 위원들에게 답변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장관님도 지금 장관직에서 물러나시면 다시 의원으로 돌아오실 분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권영진 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조금은 정무적으로 과하게 하더라도 그것을 잘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는 장관님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장관님은 제가 보기에 조금 실망스러운 점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관님 말씀하고 싶은 것 한번 해보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장관으로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언성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 대책 관련해서 저는 많은 정책적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또 의견을 달리 하지만 상대방 의견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발표한 이 대책은 국민의 어떤 기본적인 권한을 제재하는 불가피한 정책이기 때문에 주무장관으로서 떳떳하거나 이런 입장이 아니고 늘 고육지책 내지는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저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사죄하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또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호의 이견이

없다는 말씀 올리고요.

다만 10월 15일 대책은 10월 15일 발표된 것이긴 하지만 이미 그 대책을 준비해 온 것은 명절 전부터입니다. 실제 여러 가지 상황이, 명절 전부터 부동산이 폭등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로부터 국토부는 그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그 준비 과정에서 많은 이견이라든가 또 많은 정보들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실제 진행되었다는 말씀 올리겠고요. 최종적으로 그런 준비가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서 10월 15일로 날짜가 잡혔다는 말씀 올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어쨌든 국민의 기본권을 제재하는 그런 것들이 당일 2시에 오픈되는 그런 정보가 있다면 좀 늦출 수 있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저는 일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장 상황을 보면서 이것을 축소할 것인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들께 한 가지 꼭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저도 장관을 그만두면 국회의원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있고 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께서 질문하는 것들을 어떤 태도로 행정부가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공무원들이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표현하는 발언이 있어서 제가 다른 데서 좀 언성을 높인 적이 있고요.

이번에는 외람스럽겠지만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쟁에서 위원님들께서 마음껏 정무적인 선택 또 진영논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7000억을 안겼다고 하는 새 정부’, 그런 표현은 저는…… 본인은, 해당 위원님께서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할지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번 부동산 문제와 이것을 완전히 정쟁화하겠다는 의도로밖에 저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성이 높아진 것은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다 분명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이 부동산 논쟁만큼은, 부동산 정책만큼은 정쟁이 아니라 정말 집값이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그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 저는 여야가 한마음, 한뜻으로 머리를 맞대고 또 논쟁을 해도 논쟁을 하는, 그렇게 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태도를 취한 것인데요. 어쨌든 그게 과하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진 위원 9월 통계를 활용했으면 억울하게 규제받지 않았을 국민들의 문제는 조금 빠른 시간 내에 회복시켜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각계의 여러 의견을 들어서 또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오늘 질의를 마쳤는데요. 우선 여러 위원님들이, 특히 10·15 대책 관련해서 야당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집값 안정을 위해서 대책을 발표했는데, 규제지역을 발표했는데 해당 규제지역에 해당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불편과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하신 것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쪽 들으면서 조금 아쉬웠던 것 하나는 10월 15일 대책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

월 15일 7시 30분에 발표를 했어요. 발표하는 과정에서 9월 통계는 15일 2시에 공식적으로 공표가 됐고요. 아까 권영진 간사님도 문제 제기를 하셨지만 그러면 그 과정에서 왜 10월 15일 7시 반에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9월 통계가 사용되지 못한 이유 그리고 향후 앞으로……

어차피 저희가 집값 안정을 목표로 해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고 여야 모두 한마음으로 집값도 안정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민생 안정을 하는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를 하시겠다 하는 것을 좀 명확하게 하시면 보완 조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의를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하실 얘기 있으시면……

○김은혜 위원 (손을 들)

○위원장 맹성규 한 1분 정도로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김은혜 위원 2분만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맹성규 1분 정도로 하셔서 양쪽에 필요하신 분들 한 분씩만……

○김은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김은혜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김은혜 위원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은혜 위원 일하시면서 갑갑하신 적이 많으시지요? 제가 장관님 성품을 아니까 말 못 할 고충도 있으실 것으로 압니다.

저도 질문하다가 목소리가 올라갔는데 사실 장관님이나 저보다는 국민들이 더 울고 싶겠지요. 대책 이후에 엉뚱하게 규제지역에 포함된 분들은 세금도 더 내야 되고 그리고 피눈물 흘릴 사정에 접하니까 말이지요.

명확하게 하고 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계법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정부 부처가 통계 사전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받아 볼 수 있고요. 또 문제인 정부 통계 조작은 지금과 다릅니다. 그때는 집값이 워낙 올라가니까 의도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통계를 조작한 것이라서 그것과 이것을 같이 병행하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고요. 장관님이 부처를 대신해서 재판정에 갈 수 있다는 그 성품 모르는 것 아닌데 그 결기를 국민들의 권리 회복에 써 주십시오.

1분만 더 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민의 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정처분일수록 법적 검토를 더 치밀하게 하셨어야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은혜 위원 그리고 피해 회복, 권리 구제에 지금이라도 나서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통계를 받고 나서 그것을 몰랐든 아니면 하루라도 더 처분 일자를 늦춰서 국민 피해를 줄이는 행정을 하지 않은 것은 유감입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못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대체한 게 10월 13일·14일 주정심 아닙니까? 주정심은 의견 결정 기구가 아니지요. 규제 지역은 장관님이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외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는 그 주정심의

13일·14일 회의 시작과 종료 시점 그리고 진행 시간을 알려 주시고요. 국토부가 10·15 대책을 포함해서 이번 정부 출범 이후에 규제 지역을 지정할 때 적용한 통계 관련해서 법적 검토를 한 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먼저 박용갑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신다니까……

○**박용갑 위원** 예, 10초만 주십시오.

장관님, 제가 질의를 다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서면질의한 것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다음에 염태영 위원님.

○**염태영 위원** 오늘 10·15 대책에 대해서 여야가 여러 의견을 드렸습니다. 우선 사안을 사안대로 보느냐, 그것을 정치적으로 공격할 수단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과 또 질의의 수준과 답변이 너무 차이가 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장관님께서 지금 제가 보면 마지막에 권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적극 공감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6월부터 8월까지 통계를 봤느냐, 7월부터 9월까지 통계를 봤느냐에 따라서 여러 지역이 편차가 생기는 것은 정책의 예민성으로 보면 좀 더 유연하고 좀 더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계적으로 해석되고 정책을 결정한 그런 감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여야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을 장관님께서 7월부터 9월까지 사용했으면 들어가지 않았어야 될 지역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으시면 그 정책의 예민성을 그만큼 우리가 주문하는 내용대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이럴 때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덜 주면서도, 그래서 그 시점과 내용에 따라서는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피해가 덜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해 주시는 것이 하는 생각 하거든요. 장관님, 그 부분을 꼭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그리고요 국감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 국토부가 답변을 주는 내용들이 지극히 형식적이거나 이전의 관료적인 수준의 답변들이 오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장관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권이 바뀌어서 성격과 답변의 수준과 진정성이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장관님, 염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위원님 본인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을 우리 공무원들도 형식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 혹시 형식적으로 제출한 답변 또 불만족스럽거나 부족한 답변이 있으면 간사실로 얘기를 해서 일괄적으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 좀 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진짜 정말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시면 제가 분명하게 대처를 하겠고요. 국회에 제출하는 국정감사 답변 보고서 잘못 쓰면 내 앞길에 지장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할 정도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간사실을 통해서 완화해서 주시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장관님 자세를 보니까.

회의를 종료하도록 하기 전에 장관님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내용을 해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좀 더 파이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위원장 맹성규** 그러면 예산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전용기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충실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장들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일주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 및 정부관계자 여러분, 국회 직원과 의원실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산회)

○출석 위원(26인)

권영진 김도읍 김은혜 김정재 김종양 김희정 맹성규 문진석 박용갑 배준영
손명수 송기현 신영대 안태준 염태영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이근태 이연희
이종욱 전용기 정점식 정준호 천준호 황운하

○출장 위원(2인)

민홍철 복기왕

○청가 위원(2인)

염태영 한준호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전문위원 임종수
입법심의관 남궁인철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기획조정실장 문성요
국토도시실장 이상주
주택토지실장 김규철
항공정책실장 주종완
모빌리티자동차국장 김홍목

건설정책국장 남영우
 도로국장 이우제
 철도국장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 정채교
 물류정책관 김근오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 안석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 김수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강주엽
 도시계획국장 김효정
 새만금개발청
 청장 김의겸
 개발전략국장 김성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 이상욱
 한국도로공사
 기술부사장 박건태
 한국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 정정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학재
 한국공항공사
 전략기획본부장 박재희
 한국부동산원
 원장 손태락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직무대행 윤명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정용식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이성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직무대리 곽진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어명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김일환

주식회사에스알

대표이사 이종국

【보고사항】

○의안 회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3.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90)

9월 24일 회부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4.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4. 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4)

이상 2건 9월 25일 회부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6.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4)

9월 29일 회부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9. 이견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5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9. 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6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9.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68)

이상 3건 9월 30일 회부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0.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86)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0. 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3)

이상 2건 10월 1일 회부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0. 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0)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5. 10. 1. 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1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3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44)

이상 4건 10월 2일 회부됨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안

(2025. 10. 10.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0. 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9)

이상 2건 10월 13일 회부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3. 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3.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5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3.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51)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3.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53)

이상 4건 10월 14일 회부됨

항공종합정비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2025. 10. 14.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8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4.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87)

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안

(2025. 10. 14.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89)

이상 3건 10월 15일 회부됨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5.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93)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5. 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5)

이상 2건 10월 16일 회부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2.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2.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7)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0. 22.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3)

이상 3건 10월 23일 회부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3.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2)

10월 24일 회부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4.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4)

10월 27일 회부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7.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7. 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7. 윤종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7.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7.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32)

이상 5건 10월 28일 회부됨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5. 10. 29.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71)

10월 30일 회부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30.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10)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30.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12)

수소 철도차량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

(2025. 10. 30. 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18)

이상 3건 10월 31일 회부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31. 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38)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31. 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4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31. 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44)

이상 3건 11월 3일 회부됨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3. 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6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3.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74)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3.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75)

이상 3건 11월 4일 회부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4.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8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4.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96)

모빌리티기본법안

(2025. 11. 4.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9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4.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03)

행정수도특별법안

(2025. 11. 4.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05)

이상 5건 11월 5일 회부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6.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0)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2025. 11. 6.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6. 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80)

이상 3건 11월 7일 회부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7.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98)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7. 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31)

이상 2건 11월 10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9. 25. 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87)

9월 2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기반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2025. 9. 26.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20)

9월 2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2025. 10. 1. 서미화 의원·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41)

10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56)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5. 10. 2. 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71)

이상 2건 10월 1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0. 10.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31)

10월 1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0. 16.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18)

10월 2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초광역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2025. 10. 30.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2)

10월 3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0. 31.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48)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

(2025. 10. 31. 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53)

이상 2건 11월 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4.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8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2025. 11. 4. 김중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06)

이상 2건 11월 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1. 7.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2)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11. 7.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9)

이상 2건 11월 1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공포일자	비고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5741호	2025. 9. 9.	대통령령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795호	2025. 9. 30.	대통령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22호	2025. 9. 1.	부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23호	2025. 9. 19.	부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24호	2025. 9. 19.	부령
운항시각 조정·배분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25호	2025. 9. 29.	부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26호	2025. 9. 30.	부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27호	2025. 9. 30.	부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28호	2025. 10. 2.	부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155호	2025. 9. 26.	입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공고	2025. 9. 5.	입법예고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공포일자	비고
	제2025-110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131호	2025. 9. 12.	입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138호	2025. 9. 16.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령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140호	2025. 9. 17.	입법예고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156호	2025. 9. 23.	입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178호	2025. 9. 25.	입법예고
자동차등록령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180호	2025. 10. 2.	입법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08호	2025. 10. 14.	입법예고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 제2025-124호	2025. 10. 2.	입법예고
신규·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를 위한 5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법제처공고 제2025-128호	2025. 10. 23.	입법예고
이의신청 규정 정비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 제2025-133호	2025. 10. 27.	입법예고